

# 이낙연측 “이재명 득표율은 49.32%”

## “선관위 발표,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 강력 반발 “무효표 처리 의도했다면 부정선거...바로 잡아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 측은 11일 경선 도중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두관 의원의 득표를 ‘무효 처리’한 당 지도부에 강력히 반발하며 결선투표 실시를 요구했다.

이 전 대표 캠프는 전날 경선 결과 발표 직후 무효표 처리와 관련, 당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캠프 소속 의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잘못된 무효표 처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무효표를 유효화할 경우)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로 과반에 미달해 결선투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10일 민주당 선관위와 지도부의 경선 결과 발표는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배된다. 특별당규에 대한 지도부 판단에 착오가 있었다”며 “당헌·당규를 오독해서 잘못 적용하면 선거의 정당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무효표 적용과 관련한 특별당규 조항을 들어 “9월13일(정세균 후보 사퇴일) 이전에 정 후보에게 투표한 2만3천731표와 9월27일(김두관 후보 사퇴일) 이전에 김 후보에게 투표한 4천411표는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므로 당연히 유효투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얻은 표는 이미 순회경선에서 선관위가 개표결과를 발표할 때 유효투표로 공표한 것이며 이후 무효라고 별도 공표나 의결도 없었다”며 “당연히 어제 최종 결과 발표 때 ‘단순 합산’에 포함하는 것이 당헌·당규에 맞다”고 했다.

홍 의원은 “선관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한 순간 유효투표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소급해서 무효로 할 수는 없다”며 “선관위 발표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캠프 정치개혁비전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송영길 대표나 당 최고위원 일부는 당헌·당규 상론의 여지가 없다고 확신하는 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캠프 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 등 캠프 의원들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선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것은 착오”라며 “송 대표 주장대로 무효가 되려면 ‘사퇴한 때에는 사퇴한 후보자의 모든 투표는 무효가 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는 이미 유효투표라고 당시에 발표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무

## 野, 대장동 특검·與 갈라치기 총공세

### 대권 주자도 가세해 “투표 전 구속”, “후보 바뀔 것”

더불어민주당이 대선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선출하자 대장동 특검을 관철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특히 이 후보가 이전까지의 경선과 달리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참패하며 최종 득표율에서 ‘턱걸이 과반’을 기록한 데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경선 막판 이 후보가 고전을 면치 못한 것은 대장동 의혹의 영향이 컸다고 보고 특검 외에는 진상규명의 길이 없다는 메시지를 지렛대 삼아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번 경선 결과를 매개로 대장동 대 투쟁의 추가 동력을 확보했다는 게 야당의 셈법이다.

당 전략기획부총장인 성일종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광주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겼는데 (전남이) 그의 고향이자 근거지이기도 하지만 광주는 민주주의·공정 가치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곳”이라며 “민주당이 광주가 줬던 표심의 사인을 읽지 못하면서 부패정당으로 몰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의 선거인단이 (이낙연 전 대표에게 보낸) 62%로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준엄한 국민의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장동 의혹과 특검을 고리로 여당의 내부 분열까지 내심 기대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전날 이 후보 선출 직후 ‘본선에서의 선의의 경쟁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도 대장동 게이트를 이재명 게이트로 인정한 것”이라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위해 정파를 떠나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비리 후보로는 안 된다는 민주당 대의원들의 심판”이라며 “야당은 깨끗한 후보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버티면 여당 대선후보가 투표 전에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올 것”이라고 압박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CBS 라디오에서 이 후보를 겨냥해 “지금은 요행스럽게 후보로 뽑혔는지 모르나,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상대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만들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

### “부패비리 뿌리 뽑겠다” 정면돌파 의지 천명 후보 수락 연설 “경제·민생에 좌우가 어딴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지난 10일 확정된 이재명 후보가 정국을 뒤덮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이슈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만큼, 논란을 해명하는 방어적인 태도에 머물지 않고 대대적인 역공세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선결과 발표 후 후

보 수락 연설 말미에 “특별히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다”며 대장동 사안을 꺼내들었다.

그는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하며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사업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의 손에 돌아가는 것을 근절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경선 현장 취재진과의 문답과 TV 인터뷰를 통해서도 초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결가지에서 화천대유가 누구 것이냐는 이상한 소문을 내는데, 객상도 아들에게 돈을 준 사람이 주인일 것”이라며 “저는 윤석열에게 집 사줄 생각이 없고, 원유철 부인에게 돈을 준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시장 시절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치를 설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정말 무책임한 사후적 평가다.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의 추가적 이익을 대규모로 환수한 것은 대장동이 처음”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현재를 대전환의 시기로 규정하면서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대한 도전에 담대히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좌파 정책으로 대공황을 이겨낸 루스벨트에게 배우겠다. 경제와 민생에 파란색, 빨간색이 무슨 상관인가”라며 “유용하고 효율적인 진보·보수, 좌파·우파, 박정희 정책·김대중 정책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치, 행정, 사법, 언론, 재벌, 권력기관뿐 아니라 부동산, 채용, 교육, 조세,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불합리를 깨끗이 청산하겠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 누군가의 손실임이 분명한 불로소득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으로 세계적인 선망하는 문화강국 코리아를 만들겠다. 세계를 선도하는 평화인권국가를 만들겠다. 과학기술의 나라, 미래 교육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수기자

## 이재명, ‘총리급 경호’ 받는다

###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자들로 경호팀 구성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 ‘국무총리급 경호’를 받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후보에게 배치될 경찰 인력은 총 30여명이다.

일차적으로 10여명이 투입되고, 내년 2월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을 기점으로 20여명이 추가로 배치된다.

주요 정당 대선후보에 대한 경호는 경찰이 담당하는 최고 등급인 ‘을호’ 수준

으로,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4부 요인에 적용되는 단계다.

대통령 등 ‘갑호’ 경호는 경호처에서 수행한다.

앞으로 경호팀은 이 후보가 참석하는 행사장에 미리 출동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외부일정에 동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완료자만을 대상으로 구성됐다. /연합뉴스

다만 구체적인 경호 시점은 이 후보의 경기지사직 사퇴 시점을 고려해 캠프와 경찰 간에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경찰이 대선 후보 신분의 현직 지사를 경호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전례가 없는 데다 경기 도 자체 인력과도 역할이 일부 중복되는 점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www.e-dk.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